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36-2호)

# 여론속의 이典 로論

기획: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2021. 6. 30.



담당자 구정태 대리

전화 | 02-3014-1040 e-mail jtkoo@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O與民論

####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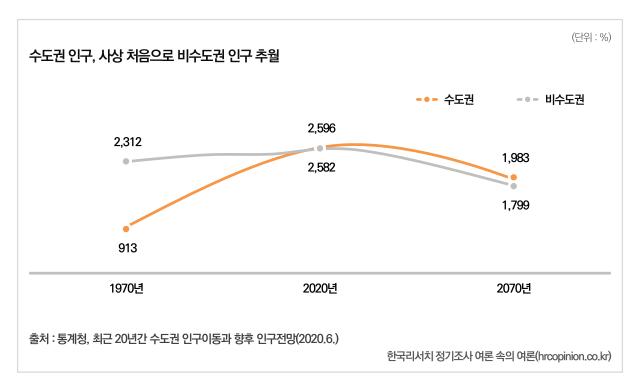
#### 주요 결과

-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 후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020년 5월 49.8%까지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1년 5월 21일 ~ 24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불균형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 진단해 보았다.
-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지역 불균형이 야기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와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 및 기본 생활시설'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일자리, 교통체계, 인프라 등 핵심적인 생활 여건에서의 격차는 지역 간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이어졌다.
-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회가 되면 다른 특·광역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전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꼽은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이유로 '교통체계가 더 잘 되어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더 나은 문화 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자리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등 삶의 편리함과 경제적 요건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일자리·의료·교통이며, 필요한 핵심 정책은 지역 산업 진흥·대기업 이전·교통체계 정비를 꼽았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높고 정책 인지도도 낮았다.



## 들어가며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에 불과했다. 그 후 2005년에는 48%로 급증했으며,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47년에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의 인구만 증가하고, 다른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020년 5월 49.8%까지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2021년 5월 21일 ~ 24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불균형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분야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지 진단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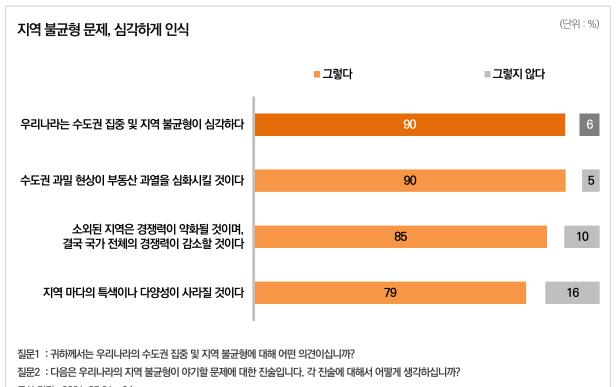


#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

#### 지역 불균형 심각성 대부분 인지, 부동산 과열·국가 경쟁력 약화 야기할 것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나. 해결 가능성에는 부정적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50%에 이르렀다. 심각성을 특히 더 절감하고 있는 쪽은 비수도권 거주자들로,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수도권 거주자(58%)에서 수도권 거주자(42%)보다 16%p 높았다.

지역 불균형이 야기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부동산 과열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소외된 지역의 경쟁력 약화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도 85%에 달했다. 또한 '지역 특색과 다양성의 소멸'을 걱정하는 응답 비율도 79%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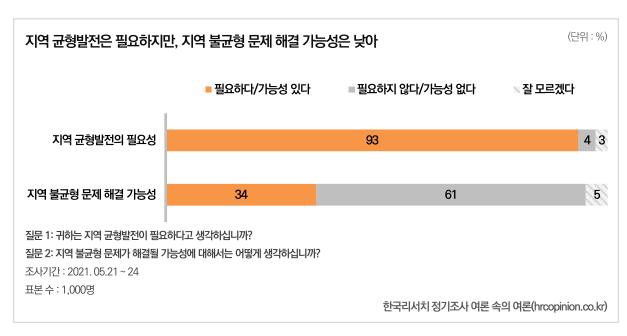


조사 기간: 2021. 05.21~24

표본 수: 1,000명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61%)가 부정적으로 전망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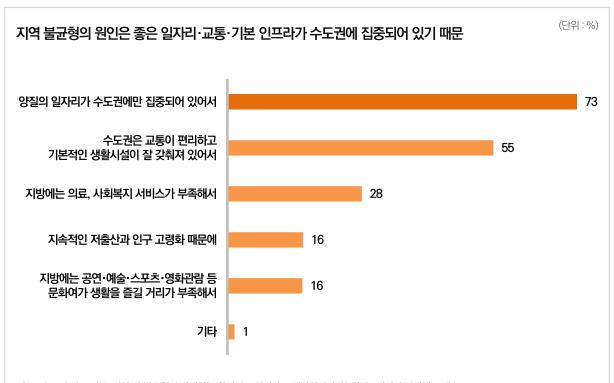




# 🧲 지역 불균형의 원인과 삶의 만족도 격차

#### 지역 불균형의 원인은 좋은 일자리・교통・기본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73%)와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 및 기본 생활시설'(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지방에는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해서'(23%),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에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거리가 부족해서'(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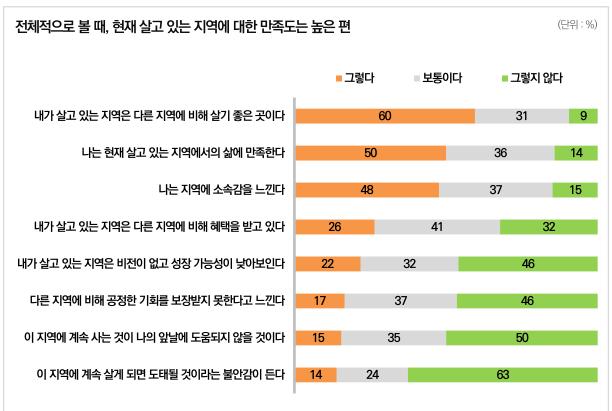
비고: 복수응답(최대 2개까지 선택) 조사 기간 : 2021. 05.21 ~ 24

표본 수: 1,000명

#### 지역 불균형이 삶의 만족도 격차로도 나타나

일자리, 교통체계, 인프라 등 핵심적인 생활 여건에서의 격차는 지역 간 삶의 만족도 차이로 이어졌다. 거대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 비전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소외감과 차별대우를 느끼고 있었다.

주요 문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살기좋다고 응답한 반면, 충청 및 대구·경북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살기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그쳤다(각각 50%, 45%). 삶의 만족도 격차는 더 컸다. 서울,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8%, 57%로 전체 응답값(50%)을 웃돌았으나, 충청 및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는 과반에 크게 못 미쳤다(각각 39%, 33%). 지역 간격차는 '혜택' 문항에서 더 극명하게 드려났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26%)을 넘은 곳은 서울(56%)이 유일했으며, 호남권은 15%, 충청권은 12%, 대구·경북권은 7%에 불과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 응답은 호남권(28%), 충청권(23%), 대구·경북권(22%)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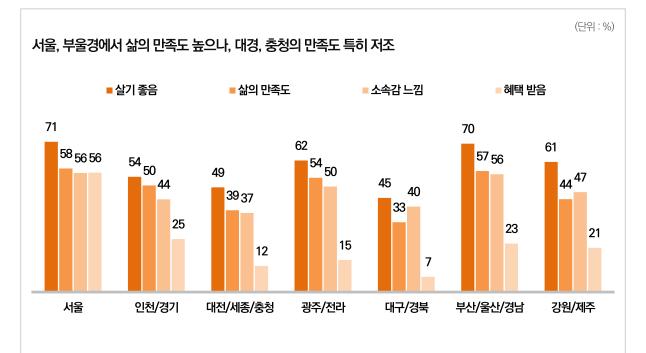


질문: 각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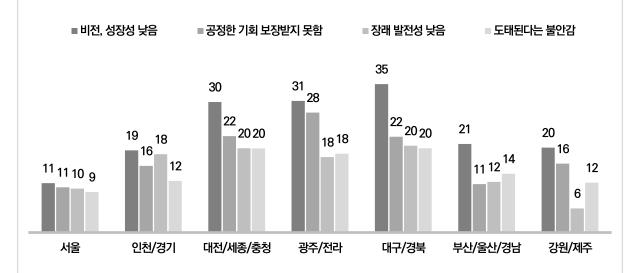
조사기간: 2021. 05.21 ~ 24

표본 수: 1,000명





#### 대경·충청·호남, 지역의 비전, 발전성, 소외의 불안감 특히 높아



질문: 각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2021. 05.21 ~ 24

표본 수 : 1,000명

(단위:%)



# 4 지역 불균형과 수도권 거주 의향

#### 지역 불균형, 수도권 거주 의향 증가로 이어져 응답자 절반 이상이 '거주 이전 하고 싶다', 희망지역은 수도권 52%

지역 불균형이 초래한 삶의 만족도 격차는 거주 이전 의향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킨다. 응답자 절반 이상(52%)이 '기회가 되면 다른 특·광역시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전하고 싶은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꼽은 응답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서울·인천·경기의 거주 이전 희망자 중 61%가 같은 수도권 내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다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 이전 희망자 중에서도 41%가 수도권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다고 답했다.

#### 절반 이상이 '거주 이전 하고 싶다'

거주를 이전할 의향이 있다

1월 의왕이 있다 52 거주를 이전할 의향이 없다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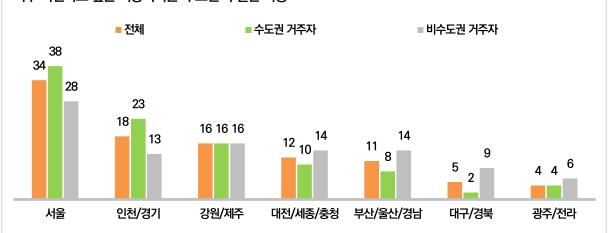
질문: 기회가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특광역시·도가 아닌, 다른 특광역시·도로 거주를 이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기간: 2021. 05.21 ~ 24

표본 수: 1,000명

#### -

#### 거주 이전하고 싶은 희망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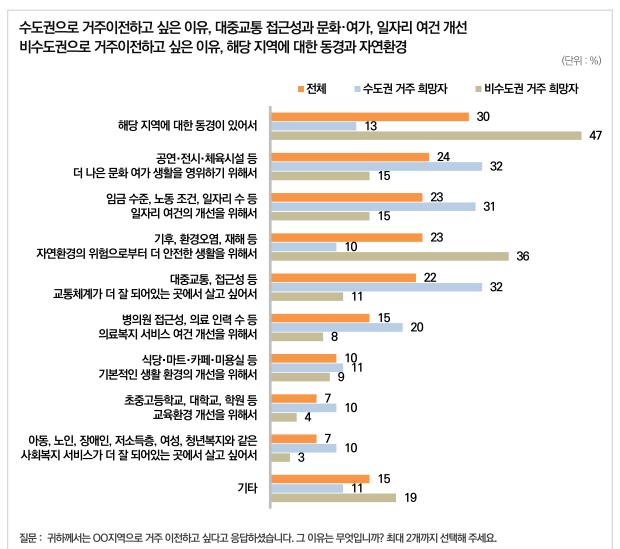
질문: 어느 지역으로 거주 이전을 하고 싶으십니까?

조사기간 : 2021. 05.21 ~ 24

표본 수: 타시도 거주 이전 희망자 519명

#### 수도권으로 거주이전하고 싶은 이유, 대중교통 접근성과 문화·여가, 일자리 여건 개선 비수도권으로 거주이전하고 싶은 이유, 해당 지역에 대한 동경과 자연환경

수도권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이유로 '교통체계가 더 잘 되어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32%)', '더 나은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32%)', '일자리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31%)' 등 삶의 편리함과 경제적 요건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지역 불균형의 원인과 유사한데, 그만큼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체계,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반증인셈이다. 반면 비수도권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꼽은 이유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47%)', '자연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36%)'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조사기간: 2021. 05.2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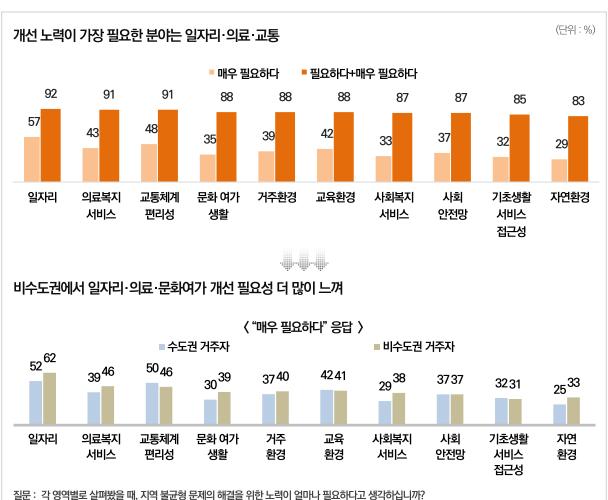
표본 수: 타시도 거주 이전 희망자 519명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 개선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분이는 일자리·의료·교통, 비수도권에서 필요성 더 많이 느껴 필요한 핵심 정책은 지역 산업 진흥·대기업 이전·교통체계 정비

그렇다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분야에 주력해야 할까? 개선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단연 일자리(매우 필요하다 57%)였고, 교통체계 편리성(매우 필요하다 48%), 의료복지(매우 필요하다 43%), 교육환경(매우 필요하다 4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 부문(매우 필요하다 62%)의 노력 필요성을 수도권(매우 필요하다 53%)에 비해 특히 더 절감하고 있었고, 의료복지 및 교통체계(이상 매우 필요하다 46%)에 이어 문화 여가 생활(매우 필요하다 40%)에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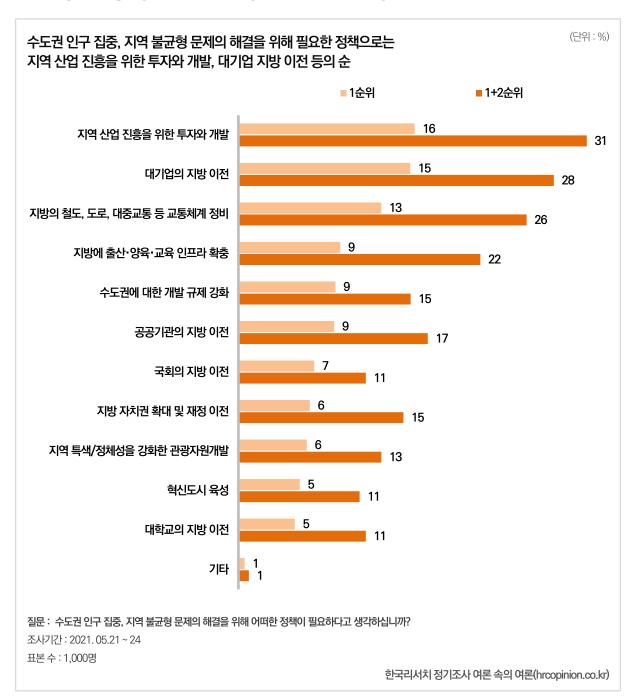


조사기간: 2021. 05.21~24

표본 수: 1,000명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물은 결과,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와 개발'이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의 지방 이전'(28%), '지방의 교통체계 정비'(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산업에의 투자와 대기업 지방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부정 평가 높고 정책 인지도 낮아 그럼에도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

현 정부의 3가지 핵심 균형발전 정책(국가균형발전·지역균형뉴딜·초광역협력을 골자로 하는 '지역주도성 강화', 지자체-대학 협력·문화관광도시 지정·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삶의 질 향상', 혁신도시 시즌2·상생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3가지 정책 모두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높았으며, 특히 지역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부정 평가가 절반에 육박했다(50%). 지역주도성 강화와 삶의 질향상은 응답자 5명 중 1명이 잘 모른다고 답했다(각각 21%, 18%).

개선 노력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었던 일자리는 부정 평가가 절반에 가까웠고, 그 다음으로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던 의료복지 개선은 3가지 핵심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내용에서조차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실제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 간에 괴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역 균형발전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촘촘한 일자리 정책과 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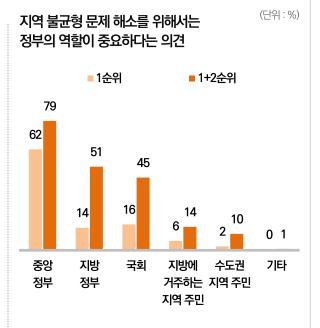
균형발전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응답자 10명 중 8명(79%)은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할이 중요한 주체로 중앙정부를 꼽았다. 특히 1순위만 놓고 보면 10명 중 6명 이상(62%)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방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각각 51%, 45%였다.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부정 평가 높지만… ■ 잘하고 있다 = 모르겠다 ■ 못하고 있다 35 36 38 15 21 18 50 44 43 지역혁신을 지역 삶의 질 주도성 향상 통한 강화 일자리 창출

질문: 각 영역별로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2021. 05.21~24

표본 수: 1,000명



질문: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2021. 05.21 ~ 24

표본 수: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은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될지 아니면 지역 산업의 진흥과 좋은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여론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1년 4월 기준 약 57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456명, 조사참여 1,27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5%, 참여대비 78.6%)
조사일시	• 2021년 5월 21일 ~ 5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여론속의

# o 興 語



Hankook Research